

기후변화와 한국의 에너지 자립 도시공동체 재생운동

박승욱(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1. 기후재앙 시대, 이미 문이 열렸다

세상은 늘 변한다. 기후도 마찬가지로 늘 변한다. 지구 역사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았던 날씨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똑같은 저녁 노을 풍경이 반복된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적어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지구와 이 우주에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2013년 5월, 미국 해양대기청(NOAA) 지구시스템연구소(ESRL)가 운영하는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관측소에서 1958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00ppm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조금 다르다. 이같은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증은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급증의 원인이 명백히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특별하다.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이 인류라는 사실은 이 변화가 인류 자체를 멸종으로 이르게 할지도 모를 재앙이라는 점에서 역설이다.

수많은 기후학자들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0만년 동안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체로 200~250ppm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해오면서 안정돼 있었다. 자본주의 산업화 직전인 약 250년 전까지도 280ppm 정도였다. 지각 변동이나 화산폭발, 운석 충돌 등의 요인 없이 250년이란 극히 짧은 시간에 400ppm을 넘어서게 된 핵심 요인은 다름아닌 자본주의 산업화와 근대화이다.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산업사회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급증시켰고 이로 인해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초단기간에 이룩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금의 도시문명과 풍요, 곧 석유문명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주범이다. 여섯 번째 대량 멸종 사태는 지금 현재진행형이다. 인류는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켰고,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기후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후를, 인류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전혀 다른 새로운 지구를 인류에게 선사하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한반도의 온실가스 농도 또한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은 서구 산업화와 근대화를 앞장서 받아들여 산업화에 성공했고 이른바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다. 화석연료 소비량도 높고 온실가

스 배출도 높고 인구밀도도 높다.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2012년에 태안반도에 있는 관측소에서 400ppm을 넘어섰다. 이곳에서 측정한 온실가스 농도는 지난 1991년 360.1ppm에서 21년 만에 40ppm이나 늘어 전세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를 실증해 주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일산화탄소(CO) 농도는 239.7ppb에서 256.6ppb로,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난화 효과가 20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진 메탄(CH₄) 농도는 1,842.8ppb에서 1,934.7ppb로 증가했다. 한반도의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 상승폭은 무려 1.8도로 전세계 평균 0.8도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 압축 산업화, 압축 민주화와 함께 기후변화도 압축해서 실증해주는 놀라운 실험실이다.

한반도는 이미 폭염, 한파,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이제는 일상화되어 정상기후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해마다 극값을 갈아 치우고 있다. 올해 8월 한반도는 기상관측 이래 최초로 울산에서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신종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최근 북극의 여름 얼음 면적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었고, 이는 기후변화를 과장하는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언론 보도는 전형적인 석유카르텔의 로비 기사이다. 북극의 여름 얼음 면적은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문제는 중장기 추세이다. 북극 얼음 면적의 추세는 명백히 급격한 축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급격한’이라는 말은 수십 수백년 단위의 기후변화 그래프 상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초속 단위 국제 금융자본주의는 1년 단위 북극얼음 변화조차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화석연료 선물에 투기 배팅을 하고 있다.

전세계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교토의정서의 파탄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의미있는 국제 협약이나 실행가능한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 수립을 이끌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대부분 국가의 이른바 선거민주주의 제도는 몇년마다 권력 그래프를 바꾼다. 거기다 1년 단위의 예산 집행과 성과주의는 기후변화 대응책같은 중장기 과제 수립과 실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저 빈껍데기의 요란한 공약과 구호만 난무할 뿐이다. 게다가 오직 단기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석유카르텔과 국제 투기금융자본은 전세계를 더빨리 초고속으로 지옥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국열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대고 있다.

2. 에너지-식량위기와 생존 농업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핵과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해, 바람, 물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소비를 혁명적으로 줄이는 에너지 자립운동을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는 것조차 쉽지 않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식량 위기이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곡물 종자의 진화 적응기간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식물의 진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여섯 번째 멸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기후변화는 식물의 멸종이라는 화염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 이제 기후변화는 적응(adaptation)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survival)의 문제이다.

석유정점(Peak Oil) 논쟁은 이제 끝났다. 2011년 석유정점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던 국제에너지기구가 연례보고서에서 2006년에 이미 재래식 석유는 생산 정점을 지났다고 발표했다. 석유정점은 이미 논쟁의 차원도 아니고 언제냐는 시기의 문제도 아니다. 핵심 문제는 몇 년 안에 닥칠 석유정점에 대해 탈석유의 에너지 체제 전환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하느냐이다. 무엇보다 전세계 논과 밭에 석유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곡물생산 감소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의 농식품 대량생산 체제는 종언을 고할 수밖에 없다. 소농과 탈석유 유기농은 필연의 불가피한 선택지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 단순한 탈석유의 유기농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종자 발굴과 새로운 농법, 즉 생존농업으로 어떻게 빠르게 전환하느냐 하는 전환과 생존의 과제가 그것이다.

이런 전환과 생존의 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북한과 큐바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소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 직후 북한과 쿠바에는 소연방으로부터의 값싼 석유공급이 한 순간에 끊기고 말았다. 사실 두 나라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소련의 석유 덕택에 수십년 동안 풍요를 구가해 올 수 있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던 공업국가였다.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전후복구 3개년계획을 수립, 금세 식량의 자급자족 체계를 갖추 수 있었다. 1950년대 북한은 남한에는 단 1대도 없었던 트랙터를 2천대나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의 단위면적당 화학비료와 농약 투입량은 전세계 1, 2위였다. 1950년대에는 남한이 태풍 피해로 식량이 부족할 때 지금과는 정반대로 북한의 식량원조를 받기도 했다.

쿠바 또한 1959년 혁명 이후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그러나 석유공급이

끊어지자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이 모든 풍요가 멈춰버렸다. 버스타도 멈추었고 기차도 멈추었다. 거의 모든 공장도 가동을 멈추었다. 탱크도 비행기도 움직일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식량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대농업은 석유농업이다. 논밭을 가는 데서부터 종자 생산, 비료, 농약, 수확, 토장, 운송, 보관 등 식량생산의 전 과정에 석유가 투입된다.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의 90%가 석유이다. 1945년 대략 23억명으로 추산하던 세계인구가 현재 70억명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세계 농지에 석유가 대량으로 뿌려져 세계 곡물생산량이 3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연히 북한과 쿠바 모두 석유농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석유없는 세상을 맞이한 두 나라의 대응은 전혀 달랐다. 북한은 식량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수십만의 주민들이 끔찍하게도 아사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여전히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쿠바는 지속가능한 유기농으로 전환, 1990년 43%에 지나지 않던 식량자급율을 1994년 97%로 높여 혁명 이후 처음으로 식량의 지급자족 체제를 갖추으로써 석유문명에서 탈석유의 생태순환형 대안 농업사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도대체 무엇이 이같은 차이를 낳았을까.

북한과 쿠바의 차이는 다른아닌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있는 소농과 자치공동체의 존재 유무였다. 쿠바의 주민들은 국가가 비상사태를 맞아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게 되자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바리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자립 자치의 탈석유 유기농업과 도시농업을 선택하였고 적어도 굶어죽는 주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 쿠바정부도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이며 주민들의 유기농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에는 소농과 주민들 스스로의 지역 자치공동체가 사라지고 없었다. 북한이란 전체주의 왕조체제는 ‘인민대중’들이 주체사상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립 자치의 공동체가 없었다. 최악의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해서 오직 수령과 당의 지시 명령을 기다리다 굶어죽는 사태는 이렇게 해서 발생했던 것이다.

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주체: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이처럼 아무리 끔찍한 위기가 닥쳐도 살 길을 모색할 수 있고 서로 도우며 사회안전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국가에 앞서 스스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자립 자치의 지역공동체이다. 상부상조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공동체, 협동조합과 다양한 공제조합, 생협, 대동계 등의 공동체 조직이야말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자유인들의 연합체이다. 이런 자유로운 노동과 노동공동체를 토대로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강력한 자치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아주 손쉽게 과시즘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

실은 히틀러의 독일과 소비에트연방, 북한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성장경제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에너지-천연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 이미 이런 무력화 사태는 전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만간 우리는 이런 석유문명 붕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한 에너지 블랙홀, 거대한 자원과 식량의 소비체인 산업화의 거대도시 또한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기후재앙이라는 새로운 세상 아래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다름아닌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협동경제이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소기업 등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소농들의 탈석유 유기농 생존농업이야말로 선택가능한 대안이다.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주권자로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바탕을 둔 지역에너지 자립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가장 강력한 사회안전망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자유인들의 연대 연합체로서의 지역공동체이다. 민주주의의 실현 주체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투철한 민주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의 핵심과 주체는 자유로운 개인들과 공동체이다. 공동체가 살아 있으면 민주주의도 살아 있다. 공동체가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는다. 나치 독일은 국가가 사회를 흡수하고 공동체도 금지하고 오직 국가공동체만을 내세웠다. 북한 또한 수령이 곧 당이자 국가라는 수령론을 앞세워 공동체와 사회를 아예 국가가 통합해버린 경우이다. 결국 공동체가 사라진 국가란 파시즘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진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동과 협업, 우애와 환대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이 말은 공동체가 없으면 사람은 국가의 또는 기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뜻한다.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내 주위의 친구들이, 얼굴을 맞대고 사는 이웃들이 이런 공동체이다. 현실의 지역공동체, 농업공동체, 생협과 같은 협동조합, 노동조합, 공제조합 등등이 공동체이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현실의 지역과 직업, 다양한 분야에서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공동체야말로 다가오는 에너지 고갈, 자원고갈, 식량위기와 기후변화의 쓰나미 앞에서 그나마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이런 공동체야말로 전쟁과 폭력의 불길한 그림자를 지우고 우리의 가족, 이웃과 더불어 함께 생존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평화의 보루이다. 이런 공

동체야말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기름진 터전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과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자신의 생활터전에서부터 다양한 우애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경쟁과 전쟁에서 협동과 평화, 우애와 환대로 세상의 가치와 인간관계를 바꾸는 일은 개인의 삶을 바꾸는 일이자 사회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바꾸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경제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운동은 우리 시대의 생활문화운동이자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함께 해야 할 아주 ‘오래된 미래’의 실천과 체험이기도 하다.

전체 가구 가운데 20% 이상이 1인 가족일 정도로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산산히 깨져 해체된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회복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런 자유의 공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의 새로운 사회적경제운동과 지역공동체운동은 이런 밑바닥 자유인들의 연합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거대한 국가폭력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내 주택가에서 숨진 지 5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할머니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민들은 아무도 그의 죽음을 몰랐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한 주택에서 김모씨(67·여)가 숨진 것을 집주인(64)이 발견했다. 집주인은 “김씨가 두꺼운 옷을 껴입고 손에는 목장갑을 낀 채 반듯이 누워있었으며 백골상태였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김씨가 수년째 보이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김씨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08년 김씨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5년 전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추위에 떨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집은 1층짜리 다가구 주택으로 모두 3가구가 살고 있다. 김씨는 1999년부터 혼자 살았으며 2008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웃은 김씨가 다른 사정으로 집을 비웠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유일한 가족인 이복동생은 10여년 전부터 연락이 끊겨 아무도 김씨를 찾지 않았다. 김씨는 보증금 700만원, 월세 10만원에 살았다. 집주인은 월세가 밀리자 몇 차례 문을 두르렸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지난 1월과 2월 부민동과 남부민동에서 숨진 지 6년, 2년이 된 백골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모두 가족, 이웃과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경향신문, 2013. 10. 1

이런 홀로죽음 사태는 이제는 신문기사로도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십 몇 위라는 한국의 실상이다.

극단의 풍요와 극단의 양극화, 극단의 위험사회가 한국의 실상이다. 한국의 도시에는 지역공동체가 사라져 가고 있었다. 이웃도 없고 가족조차 해체되어 가고 있었다.

4. 한국의 에너지 자립 도시공동체 재생운동

이런 한국 사회에서, 특히 도시에서 마을공동체운동이 성장 확대되고, 에너지 절약과 자립자치 공동체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이다. 한국 민주화운동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극단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가운데 전혀 다른 새로운 풀뿌리 지역공동체 운동이 밑바닥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공동육아라는 생활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 이웃공동체운동은 도시 대안학교운동과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점차 확산되었고, 도시농업운동과 에너지 절약-자립자치의 지역공동체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과 이후 이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공동육아운동에서 시작된 서울의 성미산마을, 삼각산 재미난 마을, 수원의 칠보산마을 등등 전국 각지의 도시 공동체운동은 주민운동의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지역공동체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성대골과 서울 곳곳의 아파트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자립 마을운동은 탈이산화탄소의 새로운 도시 대안공동체운동의 실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핵마피아 국가이다. 핵무기 제조공장으로서의 핵발전소가 부국강병의 국가주의를 표상한다는 사실을 한국은 극명하게 보여준다. 남한과 북한은 핵무기에서도 적대적 공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재체제의 지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아마도 후쿠시마 이후 핵발전소 사고가 날 가장 위험한 곳은 한국일 것이다. 수명연장된 부산 기장의 고리1호기와 경주의 월성1호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최근 불량부품 사용, 서류조작, 뇌물수수 등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핵발전소의 각종 비리와 추문은 핵마피아 중앙정부와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있지 않았던 시한폭탄의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2년 시작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이런 한국의 핵우선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건 최초의 시도였다. 동시에 한국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지역에서 모색하기 시작한 기념비적인 정책이었다. 이어 2012년 3월에는 서울시 노원구청장 등 4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핵에너지 대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탈핵선언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민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국가가 높은

가격으로 이를 사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시행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확대 시대가 본격 개막된 바 있다. 그런데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폐기되고 만다. 한미FTA를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추진한 노무현 정부 또한 시대착오의 핵과 화석연료 독재 체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예산도 모조리 끊어모아 4대강 강바닥에 처박아 버리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5년은 한국의 민간 재생에너지 운동 암흑기였다. 한국 핵마피아의 제일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으니 그야말로 핵 공포 시계는 핵폭발 1분 전으로까지 가고 만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1년부터 의무할당제도(RPS)라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그리고 여기에 절묘하게도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2005년 최초의 민간 재생에너지 회사인 ‘시민발전’과 ‘부안시민발전’이 창립되었다. 이후 시민발전운동은 에너지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소형 햇빛발전소 보급 확대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2008년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폐기와 함께 시민발전운동은 그 활동이 정지된다. 이때부터 한국의 민간 재생에너지운동은 부안시민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활동가들에 의해 풀뿌리 지역에너지 자립자치운동으로 실천의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도시 공동체 에너지 절약과 자립자치운동은 이렇게 풀뿌리 민간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이전의 시민발전운동은 공동체 재생운동의 차원이었다기보다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많았다.

2012년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과 함께 민간 재생에너지운동은 도시의 지역공동체 재생운동으로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협동조합운동은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주권자로서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이런 배경 아래 2012년 6월 서울시청, 서울시교육감과 3자 엠오유를 체결하였다. 서울시의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에 시민들의 출자로 시민햇빛발전소를 짓는 운동을 벌이자는 협약이었다. 그러나 핵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독재 체제는 강고한 뿌리를 갖고 있었고 각종 제도와 정책의 벽은 높았다.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만 서울시는 거의 1년을 소비해야 했다. 예컨대 공공건물 지붕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지으려면 지방 정부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막상 임대료를 계산해보니 서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워낙 높아 전력판매 수입 전액을 임대료로 지불해도 모자랄 정도였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제도와 정책에는 민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남아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기후변화기금 용자 등 햇빛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제도 신설과 함께 이제는 시범햇빛발전소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에너지 절약과 자립자치 도시 공동체운동 주민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머지 않아 서울 시민 전체가 햇빛발전소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파트나 주택의 베란다에 250W의 초소형 베란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우리집 햇빛발전소’ 운동은 순식간에 서울을 깨끗한 햇빛도시로 만들 것이고 전국의 모든 마을을 햇빛마을로 바꾸게 될 것이다. 에너지 생산자, 에너지 주권자가 된 시민의 힘으로 밀양에 초고압 송전탑을 짓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운동은 단순히 단순히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서 깨끗한 햇빛 전기를 생산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집 전기에너지 민낫 공개하기> 프로젝트는 지난 1년간의 월별 우리집 전기요금과 전기소비량을 공개하고 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 시범햇빛발전소와 ‘우리집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뒤 에너지절약을 실천에 옮겨 향후 1년간 얼마나 전기 소비를 줄였는지 월별로 공개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런 민간의 에너지절약 공동체운동이 활성화되었을 때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달성될 수 있다. 에너지전환은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과제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도시공동체 에너지 자립자치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도시공동체운동은 도시텃밭운동과 함께 임계점을 넘어선 기후변화의 대안이자 핵마피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한국의 에너지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을 위해 그나마 거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이기도 하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끝.